

# 도쿄재판이 전후 일본국민의 평화의식에 미친 영향\*

강 경 자\*\*

(e-mail : keiko84@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본 일본국민의 평화의식 |
| 2. 도쿄재판 법정 피고인의 진술과 언론의 반향 | 4. 나가기                     |
| 2.1. 도쿄재판의 전개와 법정 피고인의 진술  |                            |
| 2.2. 도쿄재판을 둘러싼 언론의 양상과 반향  |                            |

キーワード：東京裁判(Tokyo trial), 戦犯(war criminals), 平和意識(peace consciousness), 被害者意識(victim consciousness), 歴史認識(historical awareness)

## 1. 들어가기

도쿄재판은 일본 현대사는 물론 전 세계 현대사에 있어서도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세기의 재판”이었다. 도쿄재판의 수석판사 윌리엄 웹(William Webb)은 “역사상 이토록 중요한 재판은 일찍이 없었다.”고 하였다. 일본 역사상 전쟁의 전모를 공개적 형태로 명백하게 밝힌 것은 도쿄재판이 처음이었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사상 최대의 법정이었다.<sup>1)</sup> 도쿄재판의 재판기록은 “역사의 서고(書庫)”로서의 군국주의 일본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sup>2)</sup>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는 도쿄재판이야말로 당시 일본 지배층의 정신구조와 행동양식을 탐구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료로서, 일본 정치인들의

\* 이 연구는 2017년도 일본 스미토모재단(住友財団)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고려대 글로벌 일본연구원, 일본학(일본정치)

1) 戸谷由麻(2009) 『東京裁判：第二次大戦後の法と正義の追求』 みすず書房, p.1.

2) 半藤 一利 外(2015) 『BC級戦犯裁判を読む』 日本経済新聞出版社, P10.

에토스(ethos)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3)</sup>

무엇보다 도쿄재판은 일본 전후 레짐의 출발점이 되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을 통해 국제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는 도쿄재판의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도쿄재판은 일본 전후 “역사의 원점”으로 일컬어질 만큼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 사회에 매우 지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와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본 논문은 도쿄재판이 전후 일본 사회 국민 평화의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도쿄재판 관련 연구는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재조명 및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 일본 사회 뜨겁게 불고 있는 대일 전범재판 재고(再考)의 열풍은 도쿄재판의 문제점을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비판을 벗어나 자학사관을 비판하며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도 역사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역사인식차원에서의 논의로 그 초점이 모이고 있다.<sup>4)</sup> 문제는 도쿄재판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며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전(戰前)의 역사를 미화하며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논의로 경도되고 있다는 것이다.<sup>5)</sup> 이들 대부분은 일본은 이제 전범자라고 하는 오명을 씻고 일본의 명예회복과 자학사관 불식을 위해서도 국제사회를 향해 도쿄재판의 재고를 호소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경향에 맞서 도쿄재판에 대한 객관적 심도있는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일전범재판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도 미진한 가운데 도쿄재판에 관한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기초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다.<sup>7)</sup> 도쿄재판이 국제전범재판인 만

3) 丸山真男 著, 古矢旬 編(2015) 『超國家主義の論理と心理：他八篇』 岩波書店, pp.146-147.

4) 菅原裕(2002) 『東京裁判の正体』 国際倫理調査会.

5) 山田朗(2008) 『歴史認識問題の原点・東京裁判』 学習の友社, pp.76-77.

6) 佐藤和男(2005) 『世界がさばく東京裁判：85人の外国人識者が語る連合国批判(改訂版)』 明成社, pp. 250-251.

7) 국내에서의 도쿄전범재판 관련 연구로는 법학자들에 의한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 연구로는 -이장희 (2009)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 문규석 (2009) 「동경재판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한 연구」 김부자(외)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조명』, 동북아역사재단, 김석연(2011) 「동경재판과 ‘평화에 반한 죄’ 라다비노드 팔의 죄형법정주의」 『일본연구』 (16), 김석연(2012) 「월링 판사는 동경재판을 부정했는가 : 소수의견 제출에서 말년의 회고까지」 『일본역사연구』 (36), 신희석 (2015)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범재판 - 평화와 인도에 반한 죄의 탄생」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2호, -를 들 수 있다. 정치학적 차원에서의 연구 논문

큼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도쿄재판을 둘러싼 논의가 역사인식을 둘러싼 인식논쟁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도쿄재판을 연구함에 있어서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중요한 것을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 도쿄재판이 전후 일본 국민의회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일본국민이 신적 존재로 신봉하던 천황은 일개 인간으로 강등되고, 무조건 복종하며 따르던 정치지도자들이 전범으로서 법정에서 서야 했던 도쿄재판은 일본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쳤으며 어떠한 의식의 변화 혹은 영향을 미쳤을까? 특별히 도쿄재판은 일본국민에게 전쟁과 평화에 대해 어떤 인식과 자각을 가지게 했을까? 도쿄재판은 천황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당시 일본국민에게 아주 강렬한 인식적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도쿄재판의 법정 풍경을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주장을 통해 재구성하고, 도쿄재판에 관한 당시 언론의 모습을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도쿄재판을 둘러싼 법정 피고인과 언론이 어떻게 사회적 여론과 인식을 형성해 나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쿄재판을 통해 당시 일본국민은 어떠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고찰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당시 일본국민의 인식이 연속적으로 현 일본사회 일본국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해 나가하고자 한다.

## 2. 도쿄재판 법정 피고인의 진술과 언론의 반향

### 2.1. 도쿄재판의 전개와 법정 피고인의 진술

도쿄재판의 정식명칭은 “극동국제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이다. 도쿄재판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이하 기소된 28명의 A급 전범자들에 대해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 최종 판결이

- 하중문(2001) 「천황제, 도쿄재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일본식 '과거극복' 과정의 세 계기」 『아세아연구』 (106), 강경자 (2016) 「동경재판이 초래한 전후 일본사회 전쟁책임의식 결여 - A급 전범 면책문제를 중심으로- 」 『한일군사문화학회』 제 22집- 등이 있다.

언도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이루어졌다.<sup>8)</sup> 이 재판을 통해 재판기간 중에 병사한 두 명-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나가노 오사미(永野修身)-과 정신이상으로 소추가 면제된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 25명에 대하여 교수형 7명, 중신형 16명, 금고 20년 1명, 금고 7년 1명이라는 형이 선고되었다.

이들 도쿄재판의 법정 피고인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은 도조이었다. 1941년 10월 18일 전시내각을 구성하면서 내각총리대신과 육군대신을 겸하였던 도조는 군벌정권의 수장으로서 그의 법정 진술과 태도는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도조의 법정 진술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태평양전쟁은 자위전쟁으로서 연합국측의 대일 압박 때문에 일으킨 것이었다. ② 대동아공영권은 침략이 아니라 민족 해방이다. ③ 개전 결정에 천황의 정치 책임은 없으며 천황은 평화주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④ 태평양전쟁은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⑤ 도쿄재판이야말로 관할권 문제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다.”<sup>9)</sup>

이와 같은 도조의 주장은 1947년 12월 19일 마지막 법정 진술과 그의 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저는 여기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본제국의 국책 및 방침은 침략도 아니고 착취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책임을 지고있는 저희들로서는 **국가 자위를 위해 일어서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최후까지 이 전쟁은 자위전이며 **현재 승인된 국제법에는 위반되지 않은 전쟁**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전쟁 때문에 국제범죄가 되어 **승자에 의해 추소당하고 패전국의 적법한 관리가 개인적 국제법상의 범인이 되어 조약의 위반자가 규탄당하는 것은 생각조차 한 적 없습니다.**<sup>10)</sup>

도조는 유언 《미영제국인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8) 竹前榮治(2011) 송병권 역 『GHQ :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평사리, pp.171-174.

9) 上法快男 編 (1983) 『東京裁判と東条英機』 芙蓉書房, p.32-33.

10) 渡部昇一(2006) 『東条英機歴史の証言 : 東京裁判宣誓供述書を讀みとく』 祥伝社, pp.528-529.

지금 그대들은 승자이다. 우리들은 패자이다. 이 심각한 사실을 단호히 인정한다. 그러나 제군들의 승리는 힘에 의한 승리일 뿐 공명정대한 승리가 아니다. 대동아전쟁은 그대들이 도발한 것이며 나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자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 뿐이었다. (생략) 따라서 세계의 여론이 전쟁책임자를 추궁하려고 한다면 그 책임자는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자는 그들에게 있다. 불행히도 일본이 역부족으로 패하였으나 정의는 엄연히 일본에 있으며 이는 변치않는 진리이다. 11)

도조는 법정에서 끝까지 천황과 자신의 무죄 및 일본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일본의 대동아전쟁은 자위를 위한 전쟁이자 해방전쟁으로서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도쿄재판이야말로 관할권 문제를 포함한 문제성 있는 법정으로서 전쟁책임을 개인에게 소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항변하였다.

도조만큼 법정 진술인 중 세간의 이목을 끈 인물은 난징대학살의 주범으로 기소된 중중국방면 군사령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이었다. 난징대학살이란 일본군이 중국 난징을 점령하고 약 2개월간에 걸쳐 약 20-30만명에 이르는 주민과 포로들을 학살 강간 방화 약탈 등을 일삼은 잔학행위를 일컫는다. 당시 일본군은 8만여 명의 중국 여성들을 강간하고 산채로 배를 갈라 내장을 들어내고, 혀에 쇠갈고리를 걸어 사람을 매달아 놓는 등 악마적인 잔학행위를 거침없이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12)

도쿄재판 법정에서 이 난징사건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에 의해 제출된 방대한 증거자료와 진술서가 채택되었으며 당시 제출되었던 사망자 집계는 34만명에 이르렀다.13) 그러나 사상 유례 찾아보기 힘든 잔학 사건인 난징대학살 주범으로 법정으로 서게 된 마쓰이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그는 난징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검찰에게 자신은 사령관으로서 군의 작전을 통일 지휘하는 권한은 있었으나 각 부대의 군기와 풍기를 유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14)

11) 茂田滄海(2006) 『太平洋戦争：東京裁判……あれから60年』 近代文芸社, 284.  
 12) Chang Iris. 1998, The rape of Nanking : the forgotten holocaust of World War II Penguin Books, pp. 24-26.  
 13) 朝日新聞東京裁判記者団 編(1982) 『東京裁判 上』 講談社, pp.428-429.  
 14) 牛村圭 (2005) 『「文明の裁き」をこえて:対日戦犯裁判讀解の試み』 中央公論新社, pp.50-53.

마쓰이의 변호인측 변론은 더더욱 무책임한 것이었다. 난징대학살이 중국군에 의한 것인지 일본군에 의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강간 등의 불법행위도 2, 3건 접수되었을 뿐이라고 하였다.<sup>15)</sup>

도쿄재판 법정에서 A급 전범자들은 모두 이처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도조 내각의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東郷茂徳)는 진주만 공격의 최후통첩이 늦어진 사실과 조약이 준수되지 못한 전쟁 책임을 심문받았을 때 자신과 외무성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기습적 전쟁 계획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군에 있다고 하였다.<sup>16)</sup> 한편 개전 당시의 해군 제독 시마다 시게타로(嶋田繁太郎)는 이러한 도고의 주장을 비난하면서 일본 해군은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고심하였으며 최후통첩이 늦은 것은 전적으로 외무성의 실수라고 하였다.<sup>17)</sup> 이처럼 도쿄재판에 기소된 모든 A급 전범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일본정치철학의 대가 마루야마는 이와 같은 전범자들의 자기정당화를 “일본 과시즘의 방대한 무책임의 체계”라는 표현으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sup>18)</sup>

그런데 사실 이와같은 피고인 A급 전범들의 주장은 일본 정부 측의 구상과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22일 ‘종전처리회의(終戦処理會議)’를 설치하여 연합국에 의해 전범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 23일 ‘전범인 변호방침’을 정하여 전쟁 책임 등에 대한 답변 방침을 제공하였다. 이어 11월 5일 「전쟁책임 등에 관한 건」 각의 결정을 통해 천황에게는 전쟁책임이 없음을 천명하였다.<sup>19)</sup> 이러한 방침의 핵심 목적은 바로 천황을 보호하는 것에 있었다. 천황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범재판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개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정하라는 것이었다.<sup>20)</sup> 특히 천황의 측근들은 상황이 악화되면 모든 책임을 도조에 떠넘기면 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sup>21)</sup> 또한 도쿄재판의 변호인단에게 내려진 변호방침 역시 천황에게 전쟁책임 문제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5) 朝日新聞法廷記者団編(1962)『東京裁判. 上巻』東京裁判刊行会, pp.39-41.

16) 植松慶太(1962)『極東國際軍事裁判: 이것이文明の審判か』人物往來社, pp.114-117.

17) 전개서, 植松慶太(1962), pp.118-121.

18) 전개서, 丸山真男 著; 古矢旬 編 (2015), p. 203.

19) 荒井 信一 外編 (1990)『現代史における戦争責任』青木書店, pp.124-125.

20) 豊田隈雄(1986)『戦争裁判余録』泰生社, p.59.

21) 道野시타 나라히코(豊下植彦)(2009) 권혁대 역 『히로히토와 맥아더 : 일본의 전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개마고원, p.38.

었다.<sup>22)</sup>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 속에 도쿄재판의 법정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천황에게는 아무런 전쟁 책임이 없음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특히 도조는 천황을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천황을 철저히 옹호하였다. 그는 국책의 모든 책임은 내각 및 통수부에게 있고, 천황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1941년 12월 1일 개전 결정 또한 내각 및 통수부의 책임일 뿐 천황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은 자존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전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천황은 전쟁 책임을 져야 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천황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평화 애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sup>23)</sup>

또한 도쿄재판의 변호인들 역시 정부의 지침대로 천황과 일본을 보호하는데 변호의 역점을 두었다. 다카하시 요시즈구(高橋義次)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 입장을 “첫째는 천황폐하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협력할 것, 천황이 피고가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천황이 증인으로서 출정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둘째로는 국가 변론을 우선으로 하여 일본이 침략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sup>24)</sup> 도조 히데키의 변호인이었던 일본측 주임 변호사 기요세 이치로(清瀬一郎)도 당시 변호인단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재판관이 천황을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하였다.<sup>25)</sup> 그리고 이와같은 우려 속에 기요세 변호사 역시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면서 일본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위전쟁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26)</sup>

결국 도쿄재판의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은 한결같이 천황과 일본의 무죄 및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면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자위전쟁론에 기초하여 도쿄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 피고인의 진술은 언론을 통해, 또한 법정 방청객으로 참여하였던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공개되었다. 그리고 전범들을 향해 내려진 정부의 변호방침을 모르는 일반 일본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상당한 충격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22) 박원순(1996) 『아직도심판은 끝나지 않았다:일본의전쟁범죄연구』 한겨레신문사, pp.132-137.

23) 田中正明(1983) 『東京裁判とは何か』 日本工業新聞社, pp. 258-259.

24) 진계서 植松慶太(1962), p.224.

25) 清瀬一郎(1975) 『(秘録)東京裁判』 讀売新聞社, p.74.

26) 朝日新聞法廷記者團編(1962) 『東京裁判. 中卷』 東京裁判刊行会, pp.837-843.

## 2.2. 도쿄재판에 관한 언론의 양상과 반향

도쿄재판은 2년 반에 걸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 2만 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았다. 재판관과 피고인, 변호인들과 진행요원, 헌병과 속기사, 통역관, 사진사, 방청객과 동서의 언론인들이 모인 법정에는 날마다 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했다.<sup>27)</sup> 818회의 공판과 419명의 증인, 779부의 진술서, 4,336부의 증거 서류, 9백만 달러의 재판 비용 등 도쿄재판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규모는 당시 도쿄재판이 일본 사회에 미친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

당시 일본의 언론은 GHQ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었다. 점령정책에 대한 공공연한 반론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쿄재판의 법정 증언대에 선 이상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었다.<sup>28)</sup> GHQ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공개 재판인 도쿄재판 법정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상세히 알려진 것은 이러한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전범재판에 대한 기사나 논설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도쿄재판의 기소내용이나 법정 피고인의 자세나 진술은 대부분 주요 신문의 제 1, 2 면을 장식하였다. 도쿄재판 관련 기사마다 크고 작은 법정의 풍경과 주요 피고인들의 표정이 포착된 사진이 실렸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전범재판에 대한 기사, 특히 아사히(朝日) 신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기사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한 표현은 바로 “승자의 재판(勝者の裁き)”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45년 9월 12일자 신문 제 1면에는 “승자의 재판 기피, 역사의 비판을 기다림 (勝者の裁判 忌避 歴史の批判に待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다. 1946년 4월 21일자 신문에도 “전례없는 법의 심판 - 승자가 말하는 정의의 원리(先例なき法の裁き—勝者が示す正義の原理)”와 같은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띄는 큰 활자로 제1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일본의 언론이 전한 도쿄재판에 관한 논평은 “승자의 재판”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언론들을 통해 도쿄재판은 패전했기 때문에 승전국에 의해 재판받아야 한다는 비판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도쿄재판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1948년 11월부터는 선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1면을 장식하고 있다. 1948년 11월 1일자 신문에는 “통하지 않는

27) 전계서, 박원순(1996), p.17.

28) 牛村圭 (2004) 『再考 『世紀の遺書』と東京裁判—対日戦犯裁判の精神史』 PHP研究所, p.155.



자위(自衛) 주장- 판사의 다수결로 결정” 11월 2일자 신문에는 크고 굵은 글씨체로 “태평양전쟁으로 단죄”라고 하는 기사 제목과 함께 도조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의 사진이 실려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25명의 피고인들이 각자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지 정리한 도표가 있다. 1948년 11월 5일 <도쿄재판의 판결문> 관련 기사들에는 “침략전쟁은 범죄라고 단정” 6일 뒤 11월 11일 기사에는 “대소행동(対ソ行動)침략으로 단정”이라는 기사 제목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기사와 표제어, 사진 등을 보면 이 재판이 승자 연합국측의 이익과 논리에 기초한 재판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기사 제목에 자주 보이는 표현으로 “.. 라고 단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연합국측의 논리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단정했다고 하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언론의 중심 토픽은 단연코 도조이었다. 11월 13일자 신문 1면에는 “도조, 히로타 외 7명 교수형 무죄없음. 기도 외 16명 종신금고”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도조의 사진이 중앙에 크게 나와있다. “도조 선고를 받다” “끄덕이는 피고들- 순간 입모양이 일그러진 도조” 라고 하는 기사처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되었다.

신문의 사진과 기사뿐만 아니라 신문 사설에서도 도조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집중되었다. 1947년 12월 28일 아사히신문 사설 “전쟁의 죄를 명기하라(戦争の罪を銘記せよ)”에서는 도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조의 진술 태평양전쟁의 정치적 책임을 한 몸에 지겠다고 하는 그가 그 전쟁 책임에 대해 어떻게 변명하는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으나(생략) 그의 장문의 구술서를 관통하고 있는 근본 사상은 태평양전쟁은 어쩔 수 없는 자위전쟁이었다고 하는 주장이다. (생략) 군부는 전세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면서 자위전쟁의 이름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주장이 도조의 구술서에 있어서도 뻔뻔하게 반복되고 있다. (생략) 국민에게 처참한 피해를 안긴 증오스러운 전쟁이 단지 군부의 강행방침에 의해 단행되고 국민은 단지 그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소름끼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생략) 그러나 진정으로 평화로운 민주적 국민으로서 재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우리 군벌이 일으킨 전쟁이 얼마나 세계 평화에 큰 죄악을 범했었는가 하는 자각이 개개인의 마음 깊숙이 새겨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12월 29일자 아사히 신문의 “천성인어(天声人語)”에서도 “도조가 천황 폐하께는 절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폐하를 곤경에 빠지게 한 자가 이제와서 폐하를 수호하는 충성스러운 자와 같이 말하는 것 모습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12월 30일자 매일신문 “전쟁범죄의 제1인자(戦争犯罪の第一人者)” 기사에서는 “도조는 이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전쟁범죄의 제1인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일본의 자위전쟁이 아닌 군벌의 자위전쟁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도조의 진술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처럼 당시 언론은 도조의 일거수일투족을 문제 삼으며 그의 언행과 진술을 비판하였다. 도조야말로 국내외 가장 악독한 전쟁범죄자로서 천황폐하를 변호하는 것조차 뻔뻔스러운 자라고 하는 논평이 잇달았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군벌의 상징인 도조에 대한 매서운 비판이 잇따르면서 “모든 전쟁 책임은 도조와 군벌”이라고 하는 공식이 이루어졌다.

반면 모든 언론은 도조와 대비하여 천황의 면책은 아주 당연한 사실처럼 천황을 옹호하였다. 천황은 선량한 모습으로 미소짓고 있고, 도조는 어금니를 악물고 있는 악인의 표상이 된 사진이 유포되었다.<sup>29)</sup> 모든 전쟁책임은 도조에게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수록 천황에게는 전쟁책임이 없고 오히려 천황은 군벌의 전횡을 말리지 못하고 전쟁에 휘말리게 된 희생자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이는 철저하게 GHQ의 의도와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미 알려져 있는대로 맥아더와 연합국측은 천황의 불기소 원칙, 즉 면책을 결정한 상태이었다.<sup>30)</sup> 맥아더는 도쿄재판을 전후하여 천황의 면책을 위한 언론을 조장하였다. 극동자문위원회의 대표단이나 잡지 『라이프』, NHK 등의 무대에서 천황은 전쟁에 반대했지만 군벌과 국민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역설하였다. 도쿄재판의 수석검사 키넨도 천황은 전쟁범죄인이 아니라 일본국민 위에 있는 “꼭두각시”라고 하였다.<sup>31)</sup> 이른바 “꼭두각시 이론”으로서 히로히토는 전쟁을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없었던 연약한 희생자라고 하는 것이다. 맥아더가 도쿄재판을 전후하여 여러 경로와 미디어를 통해 연출한 효과는 천황의 면책 정당성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하였다.<sup>32)</sup> 사실 천황의 권한은 그가 전쟁을 종식시켰을 때 의심할

29) 가와무라 구니미쓰(川村邦光)(2009) 송원범 외역 『성전(聖戰)의 아이코노그래피 : 천황과 병사, 그리고 전사자의 초상과 표상』 제이앤씨, p.56.

30) 日暮吉延(2008) 『東京裁判』 講談社現代新書, p.72-74.

31) 信夫清三郎(1967) 『戦後日本政治史,1945-1952. 2:冷戦と占領政策の転換』 勁草書房, p.347.

32) 전게서, 도요시타 나라히코(豊下樞彦) (2009) 권혁태 역, p. 48.

여지없이 증명된 것이었다.<sup>33)</sup>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천황이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러나 도쿄재판을 둘러싼 모든 미디어는 “도조와 군벌”만을 비판하며 천황 및 국민은 이들에게 휘말린 피해자라고 하는 여론을 조성해 나갔다. 또한 이와 같은 여론은 GHQ에 의해서 보다 더 확산되었다. GHQ의 언론정책은 군국주의자와 국민을 분리시키면서 국민들을 향해 당신들은 열심히 살아왔으나 군부에게 속았다, 국민은 군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하는 인식을 심기는 것이었다.<sup>34)</sup> 맥아더는 “당신들은 군부에 의해 전쟁에 휘말려야 했으며 힘든 생활을 강요당했다. 나쁜 것은 군부이지 당신이 아니다. 앞으로의 일본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재건될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와 같은 내용의 라디오방송을 자주 하였다.<sup>35)</sup> 이렇게 교육함으로써 일본국민은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이며 일본국민의 막강한 분노 에너지를 미국이 아닌 군국주의자와 구질서의 파괴에 향하도록 하였다.<sup>36)</sup> 뿐만 아니라 도쿄재판의 검찰단도 일본국민은 전쟁의 피해자라고 진술함으로써 일본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였다.<sup>37)</sup>

일본국민들은 도쿄재판을 둘러싼 이와 같은 언론 분위기 속에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전쟁 책임이 없으며 자신들은 군부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전쟁의 고통은 도조를 비롯한 군부 때문이었으며, 자신들은 군부에 의해 전쟁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이 “다마사레타(だまされた: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sup>38)</sup> 당시 일본국민들의 피해자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도쿄재판을 둘러싼 언론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언

33) 朝日新聞東京裁判記者団(1983) 『東京裁判-勝者が敗子を裁けるか弁論・判決篇』 講談社, p.295.  
 34) 保坂正康(2003) 『日本解体:『真相箱』に見るアメリカ(GHQ)の洗脳工作』 産経新聞ニューズサービス, p.64.  
 35) 桑本崇秀(2012) 『自虐史観から脱却して誇り高き日本へ:大東亜戦争生き残りの老医が語る歴史の真実と日本の使命』 展転社, pp.96-97.  
 36) アジアに対する日本の戦争責任を問う民衆法廷準備会編(1995) 『問い直す東京裁判』 緑風出版, pp.249.  
 37) Gerard Brennan, 藤田久一 外篇(2013) 『再論東京裁判 : 何を裁き, 何を裁かなかったのか』 大月書店, p.78.  
 38) 존 다우어(Dower John) (2010) 최은석 역 『패배를 껴안고 :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일본과 일본인』 민음사, pp.611-618.

론의 내용을 보면 도쿄재판을 통해 낱낱이 알게 된 전쟁의 참화에 대한 참회나 아시아 제국(諸国)에 끼친 전쟁피해에 대한 속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전쟁의 침략성이 재판받고 있으며 침략전쟁을 일으킨 군부를 비난하면서도 그 어디에서도 전쟁의 침략성과 가해성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피해자 의식 위에 국민에게 부각된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부당한 “승자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패전한 일본이 승전국인 연합국 측에 의해 전범재판이라고 하는 복수예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단죄받는다는 인상을 받게 하였다. 일본국민에게 있어서 도쿄재판은 일본의 침략전쟁 때문에 재판받는 것이라고 인식되기보다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받는다는 패전의식, “패전 피해자의식”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는 많은 일본인들이 GHQ의 비군사화·민주화정책에 대해 패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굴욕적으로 느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sup>39)</sup> 패전 피해자의식은 전쟁에서 이겼다면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평화,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에 대해 진지한 자성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도쿄재판을 통해 일본국민은 군국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만행과 그로 인한 수많은 아시아 민중의 희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다. 일본국민은 어떠한 이유에서 전쟁을 지지하여 협력하게 되었는지 타민족을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해왔는지 스스로 자성하는 역사적 전환점의 계기로 삼아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도쿄재판을 둘러싼 법정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주장, 당시 언론과 교육은 “일본국민은 재판의 방관자로서 자신의 전쟁가담을 정당화”<sup>40)</sup>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도쿄재판은 일본이 수행한 침략전쟁에 대한 자각을 통해 전쟁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모든 책임을 일부 전범자들, 특별히 도조를 비롯한 군부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오히려 천황과 일본국민들에게는 완벽한 전쟁책임을 면책을 준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일본국민의 의식은 전후로 이어져 일본국민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의식에 반영되었음을 세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9) 五百旗頭真(2005) 『日米戦争と戦後日本』講談社学術文庫, p.182.

40) 전게서, Gerard Brennan, 藤田久一 外篇(2013), p.78.

### 3.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본 일본국민의 평화의식

전후 10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내각부 정부홍보실(内閣府政府広報室)은“전후 10년의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여론 조사(戦後10年の回顧と展望に関する世論調査)”이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일본 정치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직 전쟁과 전범재판에 관한 기억이 남아있을 국민을 대상으로 전후 일본의 정치·사회적 체제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sup>41)</sup> 이 세론조사의 전범재판에 대한 인식조사 파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응답결과를 볼 수 있다.

Q36 전후 전시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이 전승국에 의해 재판받고 처벌받았지만 전쟁을 일으킨 이상, 그렇게 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다(19%)                      어쩔 수 없다(66%)                      모르겠다(15%)

SQ 졌어도 전범재판은 너무 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심했다(63%)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31%)                      모르겠음(6%)

Q38 전쟁재판과 공직추방 등은 전승국이 한 것입니다만, 만약 전승국이 하지 않았더라면 일본국민 스스로 그러한 지도자들을 재판하거나 공직에서 추방하거나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책임을 물어야 한다(31%)                      특별히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46%)  
불명(23%)

Q.46 당신은 일본이 옛날처럼 아시아에 위협적인 힘이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길 원함(47%)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39%)                      불명(14%)

41) 内閣府政府広報室 「戦後10年の回顧と展望に関する世論調査」  
<https://survey.gov-online.go.jp/s30/S30-08-30-03.html> (만 20세 이상의 일본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불능의 459명 (15.3%)을 제외한 2541명 (84.7%)의 유효한 회수율을 기초로 한 세론조사이다.)

이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범재판에 대해 “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66%이라고 하는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전쟁을 일으켰으므로 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19%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범재판의 방식에 대해 63%가 너무 심했다고 답한 것을 볼 때 전범재판을 통해 전쟁책임을 자각하기보다 패전했기 때문에 너무 심한 재판을 당해야 했다는 피해자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연합국이 전범들을 재판하거나 공직추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일본국민이 책임추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46%로서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고 답한 31%보다 훨씬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전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전쟁 책임의식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후 독일 국민이 독자적으로 나치 범죄를 추궁하여 10만건이 넘는 용의자를 수사하고 6천건이 넘는 유죄판결을 내린데 반해, 일본인 스스로 내린 재판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sup>42)</sup>을 통해서도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무자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과거와 같은 위협적인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무려 47%에 달하는 일본국민이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파워를 평가하고 그 힘을 그리워하는 것을 볼 때 전쟁 가해국으로서의 인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국주의 일본이 아시아제국에 행한 전쟁의 아픔에 대한 가해의식이나 참회의식이 있다면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힘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전후 일본국민의 평화의식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일본국민은 평화헌법 헌법 9조를 기초로 평화주의 국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평화의식의 이면을 보면 실제 평화헌법의 이념과의 괴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식은 요미우리(讀賣)신문사가 2005년 19월 15일-16일에 걸쳐 실시한 면접방식의 세론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른바 “전쟁책임에 대하여 당신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라는 질문에서 “군부와 해군의 지도자는 67.3%”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숫자에 비해 “일반국민은 5%”에 불과하였다. “천황의 전쟁책임은 19.3%”에 불과하였다.<sup>43)</sup>

42) 다카하시 데즈야(高橋哲哉)(2000) 이규수 옮김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다 : 기억의 정치, 망각의 윤리』 역사비평사, pp.66-67.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도쿄재판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일 수록 “육군과 해군의 지도자”에게 전쟁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9%로서 압도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쿄재판의 내용에 대해 잘 알수록 일부 군부지도자들에게 전쟁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 육해군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전쟁책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론조사 항목에서 “아시아에 대한 전쟁책임을 이제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5%에 이르는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44)</sup>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도쿄재판이 일본국민에게 미친 인식적 영향은 특별히 평화의식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도쿄재판에 대한 인식은 일본이 패전하였기 때문에 전승국에 의해 재판받아야 했다는 피해의식이 더 컸으며, 일본인 스스로 전쟁책임을 추궁할 필요도 없고, 가능만 하다면 다시금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행사하였던 힘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A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기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이나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패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쿄재판은 전범재판을 통해 일본인이 당해야 했던 굴욕은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생각을 심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하였다.<sup>45)</sup> 도쿄재판에서 25명의 전범들은 패전때문에 형을 받은 것이며 전승국의 전승의식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비판<sup>46)</sup>은 전후 일본사회 역사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도쿄재판은 전쟁의 책임을 군부에게만 돌리고 천황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 및 일본국민의 전쟁책임을 면죄함으로써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립하는데 실패하였다. 오히려 도쿄재판의 부당성에 기초한 패전의의식과 군부에 의해 희생당해야했다는 피해자의식만을 가중시킴으로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기는 원점이 되고 말았다. 일본국민 대다수는 “방관자적 시점”에서 “승전국에 대한 냉소주의 지점”<sup>47)</sup>에 서서 평화에 대한 의식으로까지 나아가기 못했다.

43) 読売新聞戦争責任検証委員会(著)(2006) 『検証 戦争責任 <1>』 中央公論新社.p.213.  
 44) 전개서,読売新聞戦争責任検証委員会(著)(2006). 219.  
 45) 茂田滄海(2006) 『太平洋戦争：東京裁判……あれから60年』 近代文芸社, pp.282-283.  
 46) 北岡俊明(2006) 『東京裁判はでっちあげだった：ディベートからみた東京裁判』 総合法令出版.p.282.  
 47) 大沼保昭(2007) 『東京裁判, 戦争責任, 戦後責任』 東信堂, p.133.

문제는 이러한 냉소주의 지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도쿄재판을 통해 형성된 패전피해자의식은 전후 신민족주의 토양 속에 자학사관 비판이라고 하는 경사된 역사인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패전 피해자의식은 일본의 침략전쟁 범죄를 미화시키면서 “전후의 역사왜곡, 뒤틀림”<sup>48)</sup>을 낳고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쇼와 천황의 죽음은 전쟁의 기억을 상기시키게 하였으나 전쟁 책임에 대해 말하는 일본의 미디어는 하나도 없었으며 천황은 일관되게 평화주의였다는 ‘천황신화’가 되풀이되었을 뿐이었다.<sup>49)</sup> 이처럼 천황의 전쟁책임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 천황의 면책이 주요 사안이 되어버렸던 도쿄재판은 전후에도 천황을 보호하기 위한 “궤변과 날조”를 지속하게 하였으며 일본인의 평화 및 역사인식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 4. 나가기

이상 도쿄재판은 과연 일본국민의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문제의식 속에 도쿄재판이 미친 사회적 반향과 인식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도쿄재판은 전쟁책임에 대한 추궁을 통해 군국주의 일본의 정신적 계몽을 통한 전후 일본 사회 재구축을 시도한 것이었으나 전쟁의 책임을 일부 군부에게만 돌리고 천황을 포함한 정치지도자 및 일본국민의 전쟁 책임을 면죄함으로써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립하는데 실패하였다.

도쿄재판 법정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주장, 언론을 통해 일본국민의 인식에 부각된 것은 오히려 힘의 논리, 승자의 논리였고 패자가 된 것이 억울하고 패전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재판당해야 했다는 패전 피해자의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패전 피해의식은 아시아 각국에 행한 침략전쟁에 대한 참회 및 평화보다 오히려 제국주의 일본이 누렸던 과거의 영광과 파워를 동경하게 하였다.

또한 도쿄재판을 통해 형성되었던 패전 피해자의식은 전후 일본 사회 역사인식에 심각한 균열과 뒤틀림을 초래하며 왜곡된 역사인식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평화주의의 형해화 원인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동아

48) 加藤典洋 (2005) 『敗戦後論』 筑摩書房, p.70-73.

49) 다카하시테쓰야(高橋哲哉) 임성모 역(2009) 『역사인식 논쟁』 동북아역사재단, pp.94-95.



시아 역내 신뢰에 기초한 평화문화 구축에도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사회를 향한 비판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일본국민은 패전피해자의식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관점에서 일본이 자행한 전쟁범죄를 직시하며 그 사회 속에 살아온 일본국민 개개인에겐 어떠한 전쟁 책임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 어떠한 역사적 교훈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도 전후 역사의 원점이 되는 도쿄재판에 관한 연구 및 대일전범재판을 둘러싼 역사와 평화인식에 관한 비판적 논의와 연구가 국내외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원순 (1996)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 일본의 전쟁범죄 연구』 한겨레신문사, pp.132-137.
- 가와무라 구니미쓰 (川村邦光)(2009) 송완범 외역 『성전(聖戰)의 아이코노그래피 : 천황과 병사, 그리고 전사자의 초상과 표상』 제이앤씨, p.56.
- 다카하시 데즈야(高橋哲哉)(2000) 이규수 역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다 : 기억의 정치, 망각의 윤리』 역사비평사, pp.66-67.
- 다카하시 데즈야(高橋哲哉) 임성모 역 (2009) 『역사인식 논쟁』 동북아역사재단, pp.94-95.
- 도요시타 나라히코(豊下植彦) (2009) 권혁태 역 『히로히토와 맥아더 : 일본의 전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개마고원, p.38, 48.
- 존 다우어(Dower John) (2010) 최은석 역 『패배를 껴안고 :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일본과 일본인』 민음사, pp.611-618.
- 타케마에 에이지(竹前榮治)(2011) 송병권 역 『GHQ :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평사리, pp.171-174.
- 荒井 信一 外編 (1990) 『現代史における戦争責任』 青木書店, pp.124-125.
- 大沼保昭(2007) 『東京裁判, 戦争責任, 戦後責任』 東信堂, p.133
- 五百旗頭真(2005) 『日米戦争と戦後日本』 講談社学術文庫, p.182.
- 加藤典洋(2005) 『敗戦後論』 筑摩書房, p.70-73.
- 菅原裕(2002) 『東京裁判の正体』 国際倫理調査会,
- 清瀬一郎(1975) 『(秘録)東京裁判』 讀売新聞社 , p.74.
- 田中正明(1983) 『東京裁判とは何か』 日本工業新聞社, pp. 258-259.
- 戸谷由麻(2009) 『東京裁判 : 第二次大戦後の法と正義の追求』 みすず書房, p.1.
- 半藤 一利 外(2015) 『BC級戦犯裁判を読む』 日本経済新聞出版社, P10.
- 丸山真男 著 ; 古矢旬 編 (2015) 『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 : 他八篇』 岩波書店, pp. 146-147, p.203.

- 佐藤和男(2005)『世界がさばく東京裁判：85人の外国人識者が語る連合軍批判(改訂版)』  
明成社, pp. 250-251.
- 山田朗(2008)『歴史認識問題の原点・東京裁判』学習の友社, pp.76-77.
- 上法快男 編(1983)『東京裁判と東条英機』芙蓉書房, p.32-33.
- 渡部昇一(2006)『東条英機歴史の証言：東京裁判宣誓供述書を読みとく』祥伝社, pp.528-529.
- 茂田滄海(2006)『太平洋戦争：東京裁判……あれから60年』近代文芸社, 284.
- 植松慶太(1962)『極東国際軍事裁判: これが文明の審判か』人物往來社, pp.114-117, 224.
- 豊田隈雄(1986)『戦争裁判余録』泰生社, p.59.
- 朝日新聞法廷記者団編(1962)『東京裁判. 上巻』東京裁判刊行会, pp.39-41.
- 朝日新聞法廷記者団編(1962)『東京裁判. 中巻』東京裁判刊行会, pp.837-843.
- 朝日新聞東京裁判記者団編 (1982)『東京裁判 上』講談社, pp.428-429.
- 朝日新聞東京裁判記者団編(1983)『東京裁判 - 勝者が敗子を裁けるか弁論・判決篇』講談社,  
p.295
- 牛村圭(2004)『再考『世紀の遺書』と東京裁判—対日戦犯裁判の精神史』PHP研究所, p.155.
- 牛村圭(2005)『「文明の裁き」をこえて：対日戦犯裁判讀解の試み』中央公論新社, pp.50-53.
- 日暮吉延(2008)『東京裁判』講談社現代新書, p.72-74.
- 信夫清三郎(1967)『戦後日本政治史, 1945-1952. 2：冷戦と占領政策の転換』勁草書房, p.347.
- 保坂正康(2003)『日本解体: 『真相箱』に見るアメリカ(GHQ)の洗脳工作』産経新聞ニューサービ  
ス, p.64, 86.
- 桑木崇秀(2012)『自虐史観から脱却して誇り高き日本へ: 大東亜戦争生き残りの老医が語る歴史の真実  
と日本の使命』展転社, pp.96-97.
- アジアに対する日本の戦争責任を問う民衆法廷準備会編(1995)『問い直す東京裁判』緑風出版,  
pp.249
- 北岡俊明(2006)『東京裁判はでっちあげだった: デイベートからみた東京裁判』総合法令出版, p.282.
- 読売新聞戦争責任検証委員会(著)(2006)『検証 戦争責任 <1>』中央公論新社, p.213.
- Gerard Brennan, 藤田久一 外篇(2013)『再論東京裁判：何を裁き、何を裁かなかったのか』大月  
書店, p.78.
- Chang Iris. 1998, *The rape of Nanking : the forgotten holocaust of World War II*  
Penguin Books, pp. 24-26.

内閣府政府広報室 「戦後10年の回顧と展望に関する世論調査  
<https://survey.gov-online.go.jp/s30/S30-08-30-03.html> (검색일: 2017.05.23.)

논문 투고 일자 : 2018.01.10.
논문 심사 일자 : 2018.01.31.
게재 확정 일자 : 2018.02.05.

< 要 旨 >

東京裁判が戦後日本国民の平和意識に与えた影響

康慶子

本論文は東京裁判被告人の陳述と弁護人の主張、東京裁判に関する当時のマスコミの姿、及び戦後行われた世論調査に基づき、東京裁判が及ぼした社会的反響とその認識的效果を実証的に考察したものである。東京裁判被告人の陳述と弁護団の主張は被告人自身の無実と、天皇ならびに日本の戦争責任をすべて否認するものであった。また、東京裁判をめぐる当時のマスコミは天皇を含む政治指導者と日本国民の戦争責任を免責する一方、東京裁判を連合国によって断罪する「勝者の裁き」という名で批判した。このような世論の中で、日本国民は、自分自身を軍閥によって犠牲となった被害者として認識するようになり、「勝者の裁き」という東京裁判に対する否定的なイメージは、敗戦の被害者としての認識を抱かせた。東京裁判を通じて日本国民は侵略戦争に対する加害者としての自覚なしに、敗戦被害者意識だけを持ち、真の平和に対するパラダイムの覚醒に至らなかった。世論調査を通して窺えるように、日本国民の意識には、帝国主義日本が犯した侵略戦争に対する懺悔やアジア諸国への反省は見出し得ない。むしろ東京裁判を通して形成された敗戦被害者意識は、戦後の日本社会の平和意識に深刻な亀裂をもたらし、右傾化に進む要素として作用している。日本国民が過去日本が行った侵略戦争の犯罪を直視し確固たる平和意識を確立するためにも、東京裁判に関する研究と批判的論議が国内外で活発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

Effects of the Tokyo Trial on the Peace Awareness of Postwar Japanese People

Kang, Kyung-J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Tokyo Trial on the peace awareness of postwar Japanese people. By investigating the arguments of the Tokyo Trial defendants and their lawyers in court, the attitudes of the media towards the Tokyo Trial, and postwar public opinion poll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impacts of the Tokyo Trial on Japanese society and public awareness. All the testimonies of the defendants and the claims of the defense attorneys denied the war responsibilities of the war criminals, the Japanese emperor, and the nation. Additionally, the defendants and the defense attorneys questioned the validity of the Trial, justifying Japan's aggressive war as self-defense war. Moreover, the media at the time shifted the war responsibilities only to some warlords, exonerating the Japanese emperor, political leaders, and citizens. Thus, the Japanese people perceived themselves as victims of warlords, and the negative image of the Trial made them feel that they were victims of a lost war. The opinion polls reveal that signs of repentance about the Japanese invasion and a sense of guilt towards Asian countries was absent in the Japanese public attitude. Rather, the victimhood of a lost war resulting from the Trial was detrimental to postwar Japan's peace awareness and accelerated the rightward shift.

Critical studies and discussions of the Tokyo Trial are required in order for Japanese people to recognize the aggressive war crimes perpetrated by their country and establish peace awareness.